

인수위 '5+2 광역경제권' 광주·전남 주요사업 장래는

서남권 개발 대형사업 줄줄이 재검토

J프로젝트, 새만금 겹쳐 조정 불가피

광주 광산업 경제권 수혜 가능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광역경제권 개발방식(5+2)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지방 경제 구도의 재편을 예고하는 것으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존 사업도 축소·폐지 등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5대 권역이 차별화된 독특한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사업 중복으로 인한 혼란 및 규모 축소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측은 혁신도시 사업의 경우 큰 틀에서 변화가 없으나, 기업도시는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남·영암 기업도시의 핵심인 J프로젝트와 무안 기업도시 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을 클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수위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계획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무안

기업도시도 개념 및 규모 변경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도가 우려하는 대목은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각종 서남권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악영향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 전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구상'으로 광양·여수·순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무안·목포·영암·해남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 동북아의 두바이,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축으로 한 '호남권 삼각 프로젝트'를 신성장동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전남도는 이 구상이 기존에 추진중인 대형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J프로젝트로 불리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사업이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경우 같은 호남권인 전북의 새만금 사업과 거의 유사해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불가피할 실정이다.

전남도는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 과

정에서 물론 당선 이후에도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건설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자주 했던 점을 들어, J프로젝트 사업의 일부가 새만금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더욱이 나후지역에 전북과 도서지역 등 6개 지역이 포함됐으나 전남이 제외된 점(도서지역은 포함)도 걱정이다.

이와 관련 고영길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광역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수년 동안 지역

에서 추진해 온 역점 사업들이 혼선을 빚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면서 "시·도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지방에 대한 육성책이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역 경제권 재편에 따른 구체적 사업 로드맵이 드러나지 않아 지역 추진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선불리 예단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다만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조성위 폐지 등 최근 정치권에서 나타

나고 있는 축소 분위기로 인해 전망이 어둡지만 다른 대다수의 사업들은 광역경제권 개발 방식과 상관관계가 적은 개별적인 전략 사업이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의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광(光)산업의 경우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우위와 차별화가 가능한 만큼 오히려 광역경제권의 수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회의가 열린 2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이경숙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총리 후보 한승수 특사 사실상 내정

각료 후보군 금주 마무리 내주초 확정 각료 명단 국회 처리 상황 보가며 공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새 정부의 총리 및 각료 후보군에 대한 정밀 검증 작업을 금주 말까지 끝낸 뒤 내주 초 인선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다만 검증완료 후 총리와 대통령실장(현 비서실장)만 우선 발표하고 각료 명단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 상황을 보가며 추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의 한 측근은 이날 "정밀 검증 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주말이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주 중에는 총리를 비롯한 각료 명단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에는 한승수 유엔 기후변

화특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측근은 "현재 총리 후보군을 4배수로 압축해 정밀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막판 정밀검증 과정

에서 큰 하자가 나오지 않는 한 '1순위' 후보인 한승수 특사가 총리에 발탁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특사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미 대사, 상공부장관, 외교부장관, 부총

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유엔총회의 장 등 풍부한 국정·외교경험을 갖춘 데다 13,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치력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한 특사

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인척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장에는 이 당선인의 오랜 측근이자 정책참모인 유우의 서울대 교수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과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유 교수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국제전략연구원(GSD) 원장으로 현재 대통령 취임사 준비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유 교수는 이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연희뉴스

조성위 폐지 기정 사실화 추진동력 상실 사업 차질

■ 2008년 1월 25일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공부가 국정홍보처 등의 기능과 인력을 받아들여 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진단이 문공부 산하 국이나, 부서단위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추진단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극단적으로 기구의 폐지까지 논의될 수 있어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오는 4월 아시아 문화전당 기공식과 조성사업에 맞춰 전담조직, 운영 부문 인력 30여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새정부의 조직 슬림화 정책에 따라 인력 충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단 내부의 진단이다. 추진단은 전

추진단 기능·역할·위상 축소 불가피 인력충원 불가능 소규모 사업전략 우려

당이 완공되는 2012년 까지 400여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추진단은 문화도시 정책국(4개팀), 문화도시 조성국(3개팀) 등 모두 80여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현안 업무 처리가 버거워 이 가운데 45명을 계약직을 배치하는 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각 부처에 정규직을 제외한 계약직 등의 단계적인 인력감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경우 추진단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소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조성 위 폐지와 함께 추진단의 기구축소로 이어질 경우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조성위 폐지가 대세라면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추진단의 역할과 위상강화 등 대안 없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IMPERIAL
HIGHLAND SCOTCH WHISKY

50% + 추가 30~20%
일부상품 제외

임페리얼 1주년

TEL: 384-8800

